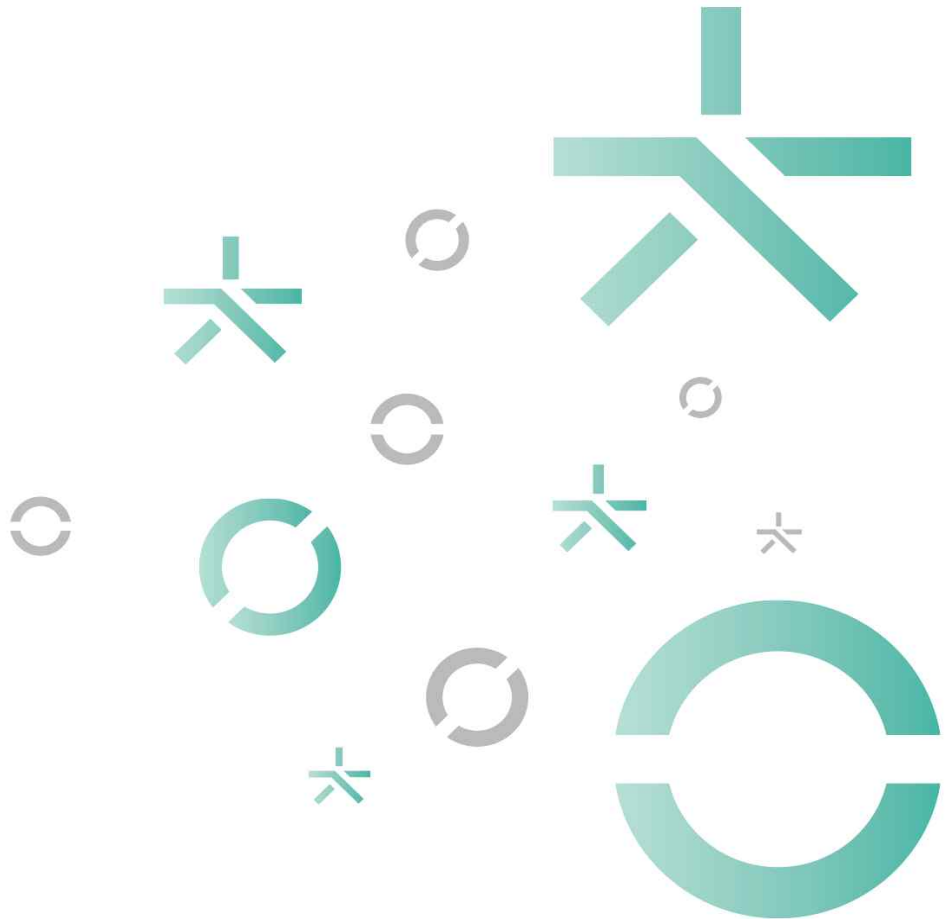


행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방향과 과제

남근우·윤주현



연구책임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참여

윤주현 도시사회연구부 전임연구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 남북 이산가족 정책은 국가 고유의 사무로서 정부 주도의 인도주의적 ‘상봉’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그러나 남북 이산가족 1세의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와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더는 상봉만이 최고의 방법은 아님. 고령화와 남북관계로 인해 이산가족의 문제가 국가적·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정책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산가족에 특화된 맞춤형 이산가족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인천 구현’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첫째, 중앙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지원은 필요하므로 인천의 접경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상봉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제시함.
- 둘째,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시함.
- 셋째, 시민과 젊은 세대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산가족의 문제를 세대를 잇는 인천시 평화·통일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남북 이산가족의 개념과 현황 요약

1) 특징

- ❖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의 빠른 증가

- 남북 이산가족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고령화 심화와 그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임.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생존자 41,650명 중 67.4%가 80세 이상 고령자이며, 매해 사망자의 비중이 생존자의 비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5년 생존자 비율은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80대 이상 비율은 68%대로 예상됨(통일부 2023b, 18-19).
- 이렇듯 정책 수혜자의 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순위별 세부 추진방안의 신속한 마련·시행이 필요함.

❖ 남북 이산가족 생존자의 가족관계 특성 변화

-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내의 관계 특성도 변화하고 있음. 현재 ‘부부/부모/자녀’ 그룹의 비중은 전체 인원의 39.9%(16,597명)로 최근 3년간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0년에는 40.5%, 2021년에는 40.2%, 2022년에는 39.9%의 비율을 보였으며, 2023년 3월 현재에도 39.9%의 수준을 유지
- 반면 ‘3촌 이상’ 그룹의 비중은 전체 인원의 18.8%(7,837명)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20년에는 17.1%, 2021년에는 17.8%, 2022년에는 18.6%의 비율을 보였으며, 2023년 3월 현재에는 18.8%를 기록
- 2025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내 3촌 이상 관계의 비율이 2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해서 이산가족 간 관계가 점차 멀어질 것으로 예상됨(통일부 2023b, 20).
- 이는 남북 이산가족의 연령과 함께 인구특성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북 이산가족이라는 정책 수혜자의 특성상 ‘가족관계’의 변화는 정책의 효과성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이를 대비한 다차원적 정책 구상과 보완이 필요함.
 - 남북 이산가족 커뮤니티의 유대관계 및 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다양한 범주의 수혜자를 포괄하는 정책 및 구성원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 등

❖ 높은 서북권 거주 인구 분포

- 남북 이산가족의 국내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서북권 분포율이 높음. 동쪽 지역보다는 서쪽 지역에, 휴전선에서 먼 남쪽 지역보다는 가까운 북쪽 지역에 분포율이 높았음.
- 특히 남북 이산가족 인구 순위 상위 세 지역은 수도권 지역으로, 최근 3년간의 지역 분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변함없이 64%대의 분포율을 보였으며, 2025년에도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통일부 2023b, 23).
- 또한 황해도 출신의 이산가족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남북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은 이산가족의 인구 비중이 크고, 황해도와 가까운 서북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시사점

❖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중앙정부 정책 협력 및 지원 확대

-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생존자 감소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¹⁾ 전면적 생사확인 및 각종 교류 방법 모색에 있어 이를 추진하는 정부 지원을 위해 인천시 내 자원, 기관,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인천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교류와 남북 이산가족 관련 교육의 거점 역할 가능
- 또한 상봉·교류 사업 진행 시 정부와 협력하여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함. 나아가 인천 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상봉·교류 방식의 다각화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음.
-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인권의 문제이자, 남북한만이 아닌 전 세계에 이산가족이 흩어져 있는 만큼 국제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한 문제임. 현행 이산가족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공간적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1) 2018년 인권이사회 결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Noting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and the requ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confirmation of the fate of family members, ...” UN Doc. A/HRC/37/L.29. (2018). 3

이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해외 이산가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가 필요함.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에 연고가 있는 해외 이산가족을 발굴하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또한 인천시와 도시 간 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 외교 추진 및 강화 가능

❖ 인천시 자체 사업의 구상 및 마련 필요

- 인천시는 남북 이산가족이 세 번째로 많은 지자체이자 남북 이산가족의 가장 많은 출신지역인 황해도와 한강 및 서해로 접하고 있는 접경 지자체임.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천시의 문제이자,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임.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시민의 공감대 및 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함. 나아가 지속가능한 남북 이산가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무엇보다 정부의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교류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감소에 대비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과 추진이 시급함.

3. 남북 이산가족 관련 정책 동향 요약

1)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추진을 위한 여건 미비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지원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남북 이산가족 1세의 고령화 및 생존자 감소와 2세 이하의 이산가족 정체성 약화를 고려할 때 인천 거주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천시만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정책은 물론, 정책 마련·추진을 위한 법적 여건은 미비한 실정임.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남북 이산가족 관련 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인천시도 법적 정비를 비롯한 정책 방향의 기획, 이를 구체화한 사업단위 편성 등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2023년 5월 현재 인천시는 남북교류·평화협력을 담당하는 조직과 남북 이산가족을 담당하는 조직, 이북5도민을 담당하는 조직이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 그러나 남북 이산가족은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한 만큼 세 조직 업무 영역에 모두 속하는 대상으로 효율적인 업무 기획·추진을 위해 업무 담당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
- 한편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 여건이 미비하고 대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이산가족 관련 사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둔 법제도의 한계도 있음.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정책을 지원·협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산가족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이산가족법에 근거한 남북 이산가족 정책은 상봉과 생사 확인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상봉과 생사 확인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이산가족 현황 파악, 고령 이산가족 대상의 기억 아카이브 구축, 이산 2, 3세대를 통한 혈맥 잇기 등 지역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 필요
 - 남북 이산가족 관련 정책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 간 정책 협의 채널도 함께 제도화 필요

2) 지자체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 마련 필요

-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어려움 중 하나는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상대인 북한과의 협력이 어렵고 불확실하다는 점임. 그러므로 협력이 원활한 시기와 원활하지 않은 시기 모두를 대비하여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다양한 주체를 통한 다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이산가족 1세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가족의 인구구성이 변하고 2세 이하의 이산가족 정체성도 변화하고 있음.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재 시점에서 효과성이 큰 사업과 장기적으로 유효한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고민이 필요함.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세밀하게 정책 수요 파악이 가능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현재 인천시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인천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추진이 필요함.

- 인천시는 황해도와 서해 및 한강하구를 통해 접하고 있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에 있어 남북한 양쪽의 접근성이 좋은 지정학적 특성을 가진 접경지자체임. 또한, 강화군·옹진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화통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따라서 인천시의 지역 특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천지역 차원에서만이 아닌 정부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초일류 국제도시 및 행복도시 인천의 정체성 강화

- 서울시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대해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증시하는 세계적 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서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인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초일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대내적으로는 인천시민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대외적으로는 도시 간 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초일류 국제도시 인천 도약에 부합함.
- 또한 민선 8기 인천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 시민행복 교통대책 수립, 공직자 대상 시민이 행복한 시정혁신 교육과정 운영 등 시정 각 분야별로 시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정책 기본계획

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시행계획의 비전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도시 조성’임.

- 남북 이산가족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민선 8기 시정목표 실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민행복도시로서의 인천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임.

4.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1)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망향대 조성

-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1세의 가장 큰 숙원은 고향 방문임. 그러나 고령화와 남북관계 경색국면으로 고향 방문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 1세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천시의 세심한 배려정책의 일환으로 고향을 기억하고 선조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망향단을 건립할 필요가 있음.
- 망향단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이 황해남도가 많다는 측면에서 북한 고향 조망권과 이동 편의성임. 이런 점에서 현재 강화도와 교동도, 연평도에 조성된 망향단과 같은 기억 보존 및 전수 공간으로서 망향단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산가족 출신이 많은 황해도, 평안남북도와 지리적 인접한 백령도 그리고 연백군(현 연안군과 벽성군)을 조망할 수 있는 교동도 인사리, 고구리, 지식리, 무학리 중 한 곳에 망향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함.
- 북한 고향 조망이 가능하고 이동 편의도 용이한 지역에 망향단을 조성한다면 망향단이 설립된 장소를 중심으로 인천시 이북도민 문화축제 행사와 지역 차원의 문화축제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 추진: 기억과 혈맥 잇기 아카이브 구축

-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현황 파악과 이산가족 관련 자료의 수집, 기록, 보관, 전시 등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는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는 점에서 민선 8기 인천시의 ‘행복도시 인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인천시의 평화·통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인천시 남북 이산가족 현황 전수조사 실시

- 남북 이산가족 인원에 대한 현황은 200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된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05년 당시 조사 역시 미응답자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조사라고 보기는 어려움.
- 2005년 당시 조사에서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5,968명임. 이 중 인천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65,910명으로 9.2%를 차지하였고, 이는 당시 인천시 인구 2,517,680명의 2.6%로 적지 않은 인원임. 그러나 인천시 이북도민연합회는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인원을 약 7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산가족의 남북한 고향찾기의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에 대한 피난사 기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이산가족 등록제로 시행해 등록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인천시 박물관, 기념관, 국공립시설 및 서해5도 여객선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 1세와 그 후손들에게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하고 대우받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의 세심한 배려, 따뜻한 동행을 통한 행복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인천 이산가족 아카이브 구축 추진

- 인천시 거주 남북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산가족에 대한 기록과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모아 인천시 이산가족 실록으로 후세에 남겨야 함.
- 첫째, (북한 고향지도 제작). 남북 이산가족 1세가 기억하는 고향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북한 고향지도를 제작함. 북한 고향지도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성사될 경우 이산가족 1세 및 후손들이 북한 고향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과거 북한의 행정체계 변화에 대한 기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6·25전쟁 피난사 정리) 남북 이산가족 1, 2세가 고령화가 더 진전되기 전에 이북 고향에 대한 기억, 피난사유, 인천 정착 및 과정, 살아온 과정, 애로사항, 희망사항 등을 구술사로 정리해 인천시의 역사기록 자산으로 보존·활용함.

- 셋째, (사진·영상·기증자료 수집 및 보관) 인천시 이산가족 현황을 토대로 이산가족의 흩어진 기억을 복원·보존하기 위해 사진, 영상, 기증 자료를 수집해 스토리텔링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DB/콘텐츠로 제작함. 이산가족 1세가 80대 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산가족 1세의 기억을 하루빨리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함.
- 넷째, (DNA 채취를 통한 남북한 이산가족 혈맥 잇기 준비) 남북한 거주 이산가족 1세의 경우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세 이하의 경우 고향방문과 대면상봉이 이뤄지지 못해 친인척에 대한 기억이 감소함. 이산가족 중 희망자를 선정하여 DNA를 채취·보관해 향후 남북한 이산가족 혈맥 잇기에 활용함.

❖ 실향민기록관(박물관) 건립

- 인천시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역사와 밀접한 강화군 교동도에 실향민기록관(박물관)을 건립해 접경지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 교동대교를 통한 접근성과 함께 이산가족의 역사성을 활용함.
- 강화군 교동도는 ▶한국전쟁 시기 황해도 피난민이 교동 원주민의 배려 속에 정착해 살면서 대룡시장을 중심으로 실향민 정서와 황해도 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 ▶황해도 연백지역과의 거리가 3km에 불과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지역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라 서해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에서 유일하게 상대를 향한 공격무기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간 교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남북당국 간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의 연결지역 ▶2014년 개통된 교동대교를 통해 시민과 학생의 자유로운 방문이 가능한 지역임. 이러한 교동도의 특성을 활용해 실향민기록관(박물관)을 건립해 이를 새로운 평화·통일자원으로 활용함.
-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는 인천시 거주 이산가족 현황 파악, 이산의 기억을 DB와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기록관(박물관)에 보존·전시·활용하는 프로젝트로서 이는 민선 8기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복도시 인천’의 정책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가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제언

1) 중앙정부 차원: 이산가족법 개정과 국회 공청회 개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 확인 관련 정책은 「이산가족법」 상 국가 고유의 사무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2세 이하의 이산가족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로 상봉과 북한 내 친인척 생사 확인은 사실상 어려움.
- 국내 거주 이산가족의 기억과 혈맥 잇기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 및 통일부 남북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별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함.
-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이산가족법」에 중앙정부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기하는 방향에서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국회 청원 및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2) 인천시 차원

❖ 「인천광역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과 인천시의회 공청회 개최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이산가족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함. 인천시는 경기도와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남북 이산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임.
- 현재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동 조례는 인천시의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역할보다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조례로서 한계가 있음.
- 향후 본 연구가 제시한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방향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서울시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참고해 인천시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천시의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 공청회 개최를 제안함.

❖ 실향민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추진단) 구성

- 남북 이산가족의 63.9%가 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에 고향을 둔 남북 이산가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은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강화도와 교동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지임.
- 또한, 강화군 교동도는 6·25 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피난 온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대룡시장을 중심으로 실향민 정서와 황해도 문화가 남아 있는 곳임. 황해남도 연안군과의 거리가 3km에 불과해 북한 주민의 일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남북통일문화의 상상력’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함.
- 향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염두에 두는 장기적 비전하에 강화 교동에 ‘실향민박물관(민속촌 또는 문화촌)’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추진위원회에서 본 연구가 제안한 ‘인천시 이산실록 프로젝트’를 논의해 그 완성품으로 실향민박물관을 시민과 학생들의 통일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함.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